

다산포럼



김재민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교수

프랑스와 독일에서 생산된 지적 담론을 오래 공부해 온 나로서는 영어 학계에서 논의된 혹은 논의되고 있는 담론을 접할 때 어색함과 더불어 시대착오를 느끼는 경우가 많다. '페미니즘'과 '정체성 정치'가 대표적 분야다. 나름으로 진보를 표방하며 전개되는 논리고, 또 고유한 역사가 있을 터이나, 알려고 시도해 보기는 한다.

내가 문제로 느끼는 대목은, 특히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에서 비영어 담론을 철저히 체계적으로 무시하거나 혹은 무시하다는 점이 드러나는 때다. 손에 꼽기 힘들 정도로 사례가 많다. 가령 들뢰즈와 과타리가 'n개의 성'을 말한 것이 1972년 출간한 '안티 오이디푸스'에서였고, 유사한 작업은 들뢰즈가 이미 1964년 출간한 '프루스트와 기호들'에서도 진행되었다.

지금부터 50년 전에 이미 '한 주제 안에 있는 n개의 성'을 분석하고 '각자에게 자신의 성들을' 공식으로 내

학문의 영어 편식과 예측이 심각하다

세운다. 그런데 너무 급진적이어서일까? 내가 접하는 영어 기반 담론에서는 저 논의를 찾기 어렵다. 아, 물론 영어 담론을 근거로 삼는 대다수 한국어 담론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틀렸거나 후져서, 아니면 비현실적이거나 한국 맥락에 맞지 않아서가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가져볼 수 있다. 하지만 저 논의는 아무리 봐도 더 현실적이고 더 한국 맥락에 맞는다. 그래서, 읽지 않아서, 혹은 읽을 기회가 없어서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

학문적 게으름을 말하려는 게 아니다. 더 큰 문제는, 말 그대로, 한국 학자들의 담론장 안에서 굳이 저 논의를 알아야 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이다. 거슬러 가면, 영어 담론의 도서 목록 안에 비영어 담론이 별로 없다는 것이 이유일 것이다.

한국어 학자 대다수가 영어 도서 목록에 없으면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된 것은, 내가 여러 차례 강조했던, 유학의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유학 자체도 문제지만, 미국 유학이 더 큰 문제다. 언제부턴지 미국 대학의 커리큘럼에 없으면 몰라도 상관없게 되어버렸다. 학문의 미국 의존이 커질수록 이 경향이 강해졌다고 보인다.

다양성을 아무리 외치고 비서구권 문헌을 커리큘럼에 넣고 해도 그건 시늬에 불과할 뿐, 정작 유럽에서 생산된 중요한 문헌마저 외면하는 게 미국 학문의 현실이

다. 아니, 아니, 예외가 있다는 걸 부정하려는 게 아니다. 훌륭한 학자들의 개별 노력도 높이 사야 한다. 다만, 내가 느끼기에 전반적 풍토는 영어 문헌 중심이다. 미국 혹은 영어에 기반한 한국어 담론 생산자를 보면 한결같이 드는 느낌이다. 영어로 논의되지 않는 담론은 없는 담론 취급한다. 이런 제도라는 무의식 차원에서 벌어지는 일이며, 대체로 학자 개인의 자질과 무관하게 관찰된다.

나는 이런 경향이 분석과 성찰의 빈곤화를 초래했다고 보며, 그래서 굳이 옥먹을 각오를 하며 이런 비판을 던진다. 분석과 성찰의 자원은 어디서 끌어와도 좋다. 다만 편식이 아니어야 한다. 그런데 영어라는 언어 자체가 편식이 심각하다. 영어로 번역된 건 굳이 원어를 확인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게 영어권 담론의 풍조다. 그런 점에서 현재 영어는 적어도 19세기부터 이어져 온 제국주의의 유일 언어(the language)다.

안타까운 건 한국어 학자 대다수가 영어담론장의 노예인 듯 보인다는 점이다. 노예란 자기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스스로 평가하지 못하는 자 아니던가. 학자들의 전반적 수준마저 이렇데, 어찌 사회 개혁을 말하고 정치 정상화를 요구할 수 있겠는가? 물론 학자들의 높이가 사회의 최고 높이라는 전제가 옳다는 조건에서 말이다.

社說

시·도 민선 8기 첫 예산 민생 회복 마중물로

광주시와 전남도가 민선 8기 첫 본예산 내년도 예산안을 각각 7조 2535억 원, 10조 3381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광주시가 옛그제 광주시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2441억 원(3.5%) 늘어난 규모다. 전남도도 올해보다 2911억 원(2.9%)이 증가한 내년도 예산안을 전남도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시도의 내년 예산안은 경제 위기 극복과 취약계층 보호에 무게를 두고 있다. 광주시는 사회복지 분야에 2조 8612억 원을, 생애주기별 돌봄 예산에 1조 8446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광주시 내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남도는 청년 응원과 따뜻한 행복공동체 실현 분야에 3조 3414억 원을, 농수축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미래 생명산업화에 1조 9119억 원을 배정했다.

미래 성장 동력 육성에도 상당한 규모가 할애됐다. 광주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산업 육성을 비롯한 미래 모빌리티, K-뷰티,

디지털 콘텐츠 문화 등 산업과 일자리 성장 예산으로 1731억 원을 편성했다. 전남도는 첨단 전략산업 육성 및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선도 분야에 1조 241억 원을 배정했다.

이제부터는 의회의 시간이다. 시도 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해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는 위기 상황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시도 의회는 시도민의 세금을 한 푼도 낭비할 수 없다는 책임감을 갖고 심사에 임해야 한다.

특히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상황에서 내년도에 이어질 것을 감안해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약자 복지'는 물론 재난 안전에 빈틈은 없는지 다시 한번 따져 봐야 한다. 예산의 우선순위와 집행 효과도 꼼꼼히 따지고 행여 연말에 쓰지 않은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감시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소멸 위기' 전남 인구 늘리기 성과 거두려면

전남 시군의 절반 이상이 소멸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가 가속화하면서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한국의 지역 간 인구 이동 특성과 지역 경제 실상을 반영해 개발한 'K-지방 소멸 지수'를 토대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인구 변화를 조사했다. 그 결과 소멸 위기 지역은 총 59곳으로 분석됐으며, 전남에서는 22개 시군의 절반 이상인 13개 지역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소멸 위험도가 가장 높은 소멸 위험 지역에 신안과 구례 등 두 곳이, 소멸 우려 지역에는 완도·함평·곡성·영광·영암·보성·진도·강진·해남·고흥·장흥 등 11곳이 포함됐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남도는 내년도까지 지방 소멸 대응 기금 3080억 원을 투입해 청년 유입과 인구 늘리기에 총력전을 펴기로 했다. 일선 시군과 함께 아이 낳고 기르기가 좋은 환경 조성, 청년

정책 지원, 도시민 유치가 초점을 맞춘 85개의 특별 시책을 추진한다.

전남의 인구는 지난 2004년 200만 명이 무너진 이후 매년 1만 명 이상 줄어오고 있다. 그동안 출생률 제고와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개선될 기미는 없다. 이제부터는 과거 시책들의 성과를 면밀히 따져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산업연구원은 지방 소멸 위험을 고조시키는 주범으로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이 나머지 88.2%의 소득과 일자리, 인구를 삼키는 불균형 구조를 지목했다. 따라서 기업과 사람이 스스로 지방으로 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소멸 위기 지역에 기업들이 이전할 수 있도록 보다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규 국책 사업을 우선 배정하며, 지방대 활성화를 통해 혁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강물의 외침을 듣고 갑옷을 떨쳐 입어 날 것을 생각했고/ 산하를 보고 의병을 만들 것을 원했다."

1907년 대한제국의 운명은 '바람 앞의 등불' 같았다. 일제는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한 고종을 7월에 강제 퇴위시키고 '정미 7조약' 체결을 강요했으며, 8월에는 대한제국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켰다. 이에 같은 해 11월 나주 한 선비가 각 지역 유림들에게 의병 일으키기를 촉구하는 격문(檄文)을 띄운다.

격문을 쓴 가석(可石) 김도속(1872-1943)은 함평 출신 남입(南一) 김도속을 비롯해 죽봉 김(菊峯)한 후의병진 도통장(都通將)을 맡았다. 600여 명으로 구성된 삼남입의 병부대는 나주와 남평·능주·장흥·강진·해남 등지에서 일본군과 싸워 상당한 전과를 거뒀다. 하지만 1909년 9-10월 진행된 일본의 대규모 '남한 대토벌작전'에 의해 삼남입 의병장과 김도속 도통장은 화순 능주에서 사로잡히게 된다.

그동안 가석의 후방 생애는 역사의 뒤안면에 묻혀 있었다. 그러나 '호남 회화사에서 소외된 서화가를 발굴하고 조명하는

작업'에 온 힘을 쏟고 있는 한 한국화 화가에 의해 가석의 행적이 파헤쳐져 맞춰졌다. 다행스럽게 열 폭 '노송도'와 '노안도'(蘆雁圖) 등 소수의 작품이 남아있어 그가 '독자적 세계를 구축한 호남의 유일한 의병지사 화가'였음이 새롭게 밝혀졌다.

석주 박종석 화백은 최근 펴낸 '사생취의(捨生取義)-의병지사 김도속의 삶과 예술'에서 가석에 대해 '나주와 영산강이 낳은 은일지사(隱逸志士)이자 품격을 갖춘 사생취의의 서화가'라고 평한다. 박 화백은 '의취생사'전을 무

등현대미술관(-12월 10일)에서 열고 있다. 가석 심수택과 힘을 합쳐 거(擧)한 후의병진 도통장(都通將)을 맡았다. 600여 명으로 구성된 삼남입의 병부대는 나주와 남평·능주·장흥·강진·해남 등지에서 일본군과 싸워 상당한 전과를 거뒀다. 하지만 1909년 9-10월 진행된 일본의 대규모 '남한 대토벌작전'에 의해 삼남입 의병장과 김도속 도통장은 화순 능주에서 사로잡히게 된다.

그동안 가석의 후방 생애는 역사의 뒤안면에 묻혀 있었다. 그러나 '호남 회화사에서 소외된 서화가를 발굴하고 조명하는

/송기동 예향부장 song@

NGO 칼럼



고윤순
광주시 안전모니터연합회장

이태원 참사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대형 사고이자 재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비극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이라는 고질병이 치유 불능 상태에 다다랐음을 여실히 입증한 것이다.

예측할 수 없는 재앙은 없다. 재앙이라는 것은 작은 문제에서부터 시작된다. 사소하다고 여기는 문제가 더 큰 연쇄적인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일컬어 '하인리히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급번 서울시의 이태원 참사 역시 안전 대책과 거리가 먼 단일한 대처와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사회는 안전불감증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많이 부족하다. 최근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안전불감증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93%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로는 '적당주의'(58.1%)가 짝꿍이 이어 '물질 만능 풍조'(17.1%), '안전 체험 교육 및 홍보 부족'(12.3%), '정부의 정책적 의지 미흡'(9.9%)순이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광주광역시에서 실시한 '재난 안

안전불감증 이제는 근절돼야

전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 44.3%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심각하지 않다'는 답변은 11.6%에 불과했다.

우리 사회가 안전에 무감각하다는 것이다. 지금의 상황과 시설이 안전하지 않은지 인식을 못 하고, 설마 내가 사고를 당하겠느냐는 식의 안일한 생각이 팽배해 있다.

과거 경제 발전만을 좇으며 '안전'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여겨왔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안전불감증으로 일어난 대표적 사고를 들자면 성수대교 붕괴, 대구 지하철 참사, 세월호 참사, 서울 이태원 참사 등 다수가 있다.

불행한 소식을 매스컴 등을 통해 듣고 보다 보면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은 얼마나 심각한가'라는 생각을 넘어 이러한 현실이 안타깝고 슬프고 때로는 화가 날 지경이다.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안전불감증이라는 독초를 뿌리째 뽑아야 한다. 이를 통해 평소에도 안전 의식을 갖고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한다. 재난을 관리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사고 후 처리가 아닌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사고 예방 활동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 시민들의 안전 문화 운동의 확산이 필요하다. 안전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령별 인

식 차이 및 주요 활동 영역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체계적인 안전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 홍보 또한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당황하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재난 대응 훈련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안전에 대한 개개인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앞서 제시한 안전 문화 확산 및 재난 대비 훈련의 시행 주체는 개인이 아닌 정부나 지자체가 맡고 있다. 아무리 훌륭한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는 대상자들이 적극적이지 않다면 실효성은 낮은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재난 관리 체계 운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진지한 자세와 의식을 보여 주고, 항상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안전모니터연합회는 국민 안전을 해치는 요소들을 찾아내고 이를 근원적·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재난 안전 사고의 요인들을 미리 예측해 위험 상황에서 미리 대처하도록 제보하고 국민의 안전 의식 수준을 높이는 각종 안전 문화 생활화 실천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보다 안전하고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시민 모두가 안전사고 예방에 관심을 기울이고, 근본적인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기 소망한다.

기고



강구섭
전남대 교수

통일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계속 낮아지고 북한 문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적 기반 조성을 위해 평화통일 교육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 한반도의 긴장을 야기하는 북한의 도발적 행위가 계속되는 국면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평화통일 교육의 필요성은 더 커진다.

이러한 시기에 지역 차원의 컨센서스 속에서 평화통일 문제를 다루고 있는 광주 지역의 책임과 역할은 막중하다. 반면 광주 지역의 평화통일 교육은 양적 질적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통일·북한 문제에 대한 무관심 경향도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전체 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광주 지역 평화통일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평화 구축의 기반, 통일 교육 활성화

광주 지역 평화통일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먼저 광주 지역의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 및 평화통일 교육 현황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방향, 세부 내용 및 실행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자가 수행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역에 대한 외부의 인식과 달리 일부 관심층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지역 구성원은 통일·북한 문제에 대한 낮은 관심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평화통일 교육 참여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역 구성원의 통일·북한 문제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면밀히 분석해 지역 특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광주 지역 평화통일 교육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역 차원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의 저변에 있는 평화통일 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 무관심이 학교·사회에서 평화통일 교육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지 않은 일선 학교 교사들이 평화통일 교육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편향성 시비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이는 평화통일 교육이 위축되는 상황을 유발하고 있다. 개방적 입장에서 통일·평화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평화통일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차원의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평화통일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 차원의 물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북한 문제를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접점 지역 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광주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는 가운데 참여자의 관심과 흥미에 기반한 평화통일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지역 거점의 설립 및 운영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학생 및 일반인 등 전체 지역 구성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실행, 평화통일 관련 정보 및 논의의 장 제공 등의 제반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평화통일 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30여 년 전 통일을 이룬 독일 사회에서는 그동안 이룩한 광복할 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동·서독 주민의 정서적 심리적 통합을 위해 한 세대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우리의 평화통일은 독일의 사례 보다 훨씬 더 험난하고 지난한 노력이 요구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중 갈등으로 격화되고 있는 신냉전 시대에 한반도에 드리운 암운을 걷어내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기 위해 '민중 인권 평화 도시'를 표방하는 광주 지역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경 치 부 220-0652 예 향 부 220-069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21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전 남 본 부 220-0680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